

2. 출제개요

가. 출제의도

올해 인문계열 모의 논술 고사는 지난 3년간의 출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통합 사회>,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경제>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용하게끔 함으로써,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포괄하는 종합적 고차 사고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하나의 문제 사례를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와 제시문을 배치하고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폭과 깊이를 갖춘 종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고등학생 수준의 인문적 소양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이번 논술 고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과 사생활 보호’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응시자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검사, 추적, 역제의 방법을 적극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평가하되, 도덕적 판단의 대표적인 두 원리인 의무주의와 결과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해 보도록 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사생활 보호의 원칙에 더 깊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제시문 <다>의 OECD 원칙에 비추어 한국의 사례를 평가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실제 사례를 감안하여 그 원칙을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원리적 사고에 기초한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문제1]과 [문제2]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각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각각의 논지를 전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나. 제시문요약

제시문 <가>는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가디언, 뉴욕타임즈 등에서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한 기사, 그리고 해외에 배포한 한국 정부의 보고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독일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발췌하여 작성되었다. 제시문은 한국이 ‘검사’, ‘추적’, ‘역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던 데는 잘 갖춰진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큰 역할을 했음을 상세한 사례와 함께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문제1, 2와 연관된 주제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GPS와 신용카드 거래 내역 추적, 확진자 방문 장소 공개 등은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을 소개하고 있다. 수험생은 제시문으로부터 첫째, 소개된 한국 정부의 조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사생활 보호에 위협이 되는지, 둘째, 그러한 위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마만큼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셋째, 사생활 침해의 허용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도덕적 판단의 두 가지 원칙으로 빠짐없이 소개하는 의무주의와 결과주의를 발췌·수정하고, 수험생의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두 원칙의 실제 적용 과정을 보충하여 기술한 것이다. 내용을 보충하면서 <토론수업을 위한 응용윤리학>(바루흐 브로디)을 참고하였다.

제시문 <나> ①은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와 연관된 각종 의무들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무주의 도덕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의무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도덕적 판단을 수행한다. 첫째, 당면한 상황에서 완수해야 할 의무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둘째, 하나의 의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무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살펴본다. 셋째, 만약 어떤 방법으로도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어느 의무가 우선하는지 순위를 결정한다. 넷째, 나중 의무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앞선 의무를 완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이를 수행한다. 수험생은 이 절차를 숙지하고, 제시문 <가>의 상황에서 국가가 하여야 할 일을 결정하는 데 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 사이에

서 어떤 절차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 ②는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당면한 상황에서 가져올 결과가 가장 좋으나 아니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과주의 도덕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결과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도덕적 판단을 수행한다. 첫째, 당면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들을 모두 찾는다. 둘째 각 행위가 가져올 결과들, 다시 말해 치러야 할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하여 어느 행위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지 판단한다. 셋째, 가장 좋은 결과를 낳으리라 예상되는 행위를 확정해 이를 수행한다. 수험생은 이 절차가 의무주의와 어떻게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제시문 <가>에 소개된 한국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데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결과주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것이었는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다른 조치는 없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평가의 관건임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교과서 <통합 사회>와 OECD에서 2013년에 발간한 <The OECD Privacy Framework>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수정한 것이다.

제시문 <다>는 정보화가 인간의 삶에 미친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보화 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도용 및 사생활 침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다>에 제시된 정보통신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예상되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져온 사생활 침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며,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제시문 <다>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이에 관한 개정안인 'OECD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은 사생활 침해에 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8대 원칙이란 수집 제한의 원칙, 정보 정확성의 원칙, 목적 명확화의 원칙, 사용 제한의 원칙, 보안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여의 원칙, 책임의 원칙으로 제시문에는 각각에 대한 상세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문제 풀이와 특히 관련되는 부분은 이 8대 원칙이다. [문제 2]에서 8대 원칙을 통해 평가해야 할 것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 과정이므로 정부 당국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사용 목적, 개인정보 사용, 개인정보 보안 등의 세부 활동을 제시문 <가>에서 최대한 찾아내고 그것들을 8개 원칙 각각에 배치하여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문항해설

<문제 1>

본 문제는 제시문 <나> ①, ②에 소개한 서로 다른 도덕 원칙과 판단 절차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이를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 즉 코로나19 역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사생활 제한 조치에 적용하여 그 조치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각각의 근거가 ①과 ②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제시될 수 있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각각의 근거들을 수험생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이끌어낼 것을 요구한다.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구성의 체계성과 내용의 완결성 및 문장 표현력을 통해서 응시자의 이해력,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문 <나> ①, ②에 소개한 두 도덕 원칙과 그 원칙에 따라서 달라지는 판단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 즉 '코로나19 역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한 것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한국 정부 당국이며, 판단되는 행위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정부 당국의 조치이며, 그 조치의 핵심은 감염병 확장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이를 부분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이 답안에서 먼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둘째, <나> ①의 관점과 판단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의무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완수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갖게 되는 대표적인 의무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는 다른 한편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시 말해 국민 건강 보호 의무와 국민의 사생활 보호 의무라는 국가의 두 의무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 후반부는 첫 번째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두 번째 의무를 일부 포기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 정부 당국은 의무 충돌 상황에서 첫 번째 의무가 두 번째 의무가 우선하며 따라서 첫 번째 의무를 위해 불가피한 만큼은 두 번째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취한 개인 정보 수집(GPS 추적 및 감시카메라, 신용카드 사용 내용 확인) 및 개인 정보 공개(확진자의 성별, 나이, 방문 장소의 이름과 주소) 역시 견고한 법률 체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그러한 수준에서의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무주의자의 긍정적 평가는 한국 정부가 밝힌 의무 우선순위와 엄격한 법률에 의거한 한국 정부의 개인 정보 공개 조치 모두 적절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여러 갈래에서 가능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무보다 두 번째의 사생활 보호 의무가 더 우선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을 수도 있으며, 우선순위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실제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과도하여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거나 또는 반대로 과소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첫 번째 의무 수행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의 답안에서는 의무주의자의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의 근거가 잘 드러나야 한다.

셋째, <나> ②의 관점과 판단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취한 사생활 제한 정책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또 앞으로도 가져올 것인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강제적 봉쇄 조치와 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시각에서 보자면 결과주의자는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조치들도 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긍정 평가의 근거는 더욱 충실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 평가의 근거 역시 분명해진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가능했다는 점을 어떤 형태로든 보여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국 정부의 조치는 사생활 침해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나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으며, 좀 더 세부적으로는 사생활 침해 요소를 더 축소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거나 반대로 사생활이 더 침해되더라도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 공개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등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의 답안에서는 결과주의자의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들이 잘 드러나야 한다. 결과주의적 비판에서는 특히 현재의 조치나 정책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대안적 조치나 정책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설득력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

넷째, 한국 정부가 펼친 정책에 대해 <나> ①, ②의 관점에서 가능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의 근거들을 정리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근거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자신의 견해가 긍정적인 쪽이라면 앞에서 밝힌 긍정의 근거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의 근거를 반박하는 자기 나름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며, 반대로 부정적인 쪽이라면 반대쪽 방향으로 자기 나름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견해와 근거를 서술할 때에는 그것이 앞서서 정리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의 근거들을 종합할 때 뒤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논의 선후의 연관성이 잘 드러나도록 답안이 서술될 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 2〉

본 문제는 제시문 <다>에 제시된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을 서술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문 <가>에 나타난 감염병 확진자 정보 공개에 관한 한국 정부 정책이 적절한지를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사생활 보호 8대 원칙 중 ‘수집 제한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며, 정보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확진자 정보를 수집해 온 한국 정부의 정책에 비판을 가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해볼 수 있다. 또 ‘사용 제한의 원칙’에 따르면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일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견고한 법률 체계를 갖춘 한국 정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확진자 정보 공개는 적절했다고 평가하기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통해 제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 사고력 및 근거 제시 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답안 구성의 체계성과 내용의 완결성 및 문장력, 표현력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문 <다>에서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의 주요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시문 <다>의 내용 이해는 결국 제시문 <가>에 기술된 한국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덟 가지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한국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일을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이 일부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인정보 공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한다면 사생활 보호는 존중받아야 할 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양측의 평가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제시문 <다>로부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찾아 제시문 <가>를 평가하는 데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의 이름과 주소까지 수집, 공개한 것은 8대 원칙 중 두 번째인 ‘정보 정확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적절성 판단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는 과연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에 제시된 세 가지 사례에 비추어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의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의 내용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확진자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원치 않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언론의 보도내용으로 인해 성 정체성이 원치 않게 공개된다거나,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다녀간 곳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매출이 급락하고, 학교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는 공개되어도 무방한가?’ 그리고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심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쟁점을 토대로 제시문 <다>에 제시된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창의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를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해 구제의 원칙’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에서 보완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도록 한다.

3. 평가기준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	5	• 제시문 <나> ①, ②의 도덕 원칙과 판단 절차를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 즉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사생활 침해 정책'에 적절히 적용하였는가?
	15	• 제시문 <나> ①의 관점과 판단 절차에 따라 때 한국 정부의 조치를 어떤 근거로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적절히 보여주었는가?
	15	• 제시문 <나> ②의 관점과 판단 절차에 따라 때 한국 정부의 조치를 어떤 근거로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적절히 보여주었는가?
	10	•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나> ①, ②의 관점에서 내놓을 긍정적, 부정적 평가의 근거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었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문제2	10	• 제시문 <다>에 기술된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게 정리하였는가?
	20	• 제시문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정보 공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15	• 문제에 주어진 세 가지 사례가 내포하는 쟁점에 비추어 제시문 <다>의 사생활 보호 원칙에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문제 1>

1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 첫째, 제시문 <나> ①, ②의 도덕 원칙과 판단 절차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 즉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사생활 침해 정책'에 적용하기
- 둘째, 제시문 <나> ①의 관점과 판단 절차에 따라 때 한국 정부의 조치를 어떤 근거로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 셋째, 제시문 <나> ②의 관점과 판단 절차에 따라 때 한국 정부의 조치를 어떤 근거로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 넷째,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제시문 <나> ①, ②의 관점에서 내놓을 긍정적, 부정적 평가의 근거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기

첫째 부분

- 제시문 <나> ①, ②에 소개한 두 도덕 원칙과 그 원칙에 따라서 달라지는 판단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였는지 점검한다.
- <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이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한국 정부 당국의 정책적 조치이며, 그 조치의 핵심은 감염병 확장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이를 부분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둘째 부분

-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국가나 정부가 완수해야 할 의무 및 이와 상충할 수 있는 의무를 적절히 나열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국가가 가져야 할 의무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 당국의 조치와 시각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 당국은 국민 건강 보호 의무와 국민의 사생활 보호 의무라는 두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의무가 두 번째 의무가 우선하며 따라서 첫 번째 의무를 위해 불가피한 만큼은 두 번째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한국 정부가 실제로 취한 개인 정보 수집 및 개인 정보 공개 절차와 행위에 대해 의무주의자가 긍정적 및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각각의 근거를 제대로 밝히고 있는지 점검한다. 특히 부정적 평가는 의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 정부의 구체적 조치 방법에 대한 이견 등 여러 갈래에서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한다.

셋째 부분

-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취한 사생활 제한 정책이 다른 어떤 가능한 정책보다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또 가져올 것인지 여부가 한국 정부의 조치를 평가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한다.
- 한국 정부가 실제로 취한 개인 정보 수집 및 개인 정보 공개 절차와 행위에 대해 결과주의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밝히고 있는지 점검한다.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가능한 조치들도 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 답안에 설득력 있게 서술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 한국 정부가 실제로 취한 개인 정보 수집 및 개인 정보 공개 절차와 행위에 대해 결과주의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밝히고 있는지 점검한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가능했다는 점이 어떤 형태로든 설득력 있게 논증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부정적 평가는 지금 정책이 초래할 더 나쁜 결과를 밝히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안겨줄 다른 조치를 제안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한다.

넷째 부분

- 수험생 자신의 견해가 긍정적인 쪽이라면 앞에서 밝힌 긍정의 근거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의 근거를 반박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쪽이라면 그 반대쪽 방향으로 자기 나름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수험생 자신의 견해와 근거가 앞의 논의를 종합하여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논의 선후 간에 연관성을 갖추었는지 점검한다.

〈문제 2〉

2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첫째, 제시문 <다>에 기술된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게 정리하기
- 둘째, 제시문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정보 수집 및 공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 셋째, 문제에 주어진 세 가지 사례가 내포하는 쟁점에 비추어 제시문 <다>의 사생활 보호 원칙에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첫째 부분

- 제시문 <다>에 드러난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제시문 <가>를 평가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선별·정리하였는지를 점검한다.
- 응시자가 해당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해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둘째 부분

- 제시문 <가>에 서술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정보 수집 및 공개 과정 가운데 제시문 <다>의 8대 원칙과 짝지어 평가할 만한 요소들을 상세히 발굴하여 제시하였는지 점검한다.
- 서술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정보 수집 및 공개의 세부 내용이 8대 원칙 중 구체적으로 어느 원칙과 관련되는지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련성은 적절한지 점검한다.
- 관련된 원칙에 비추어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루어진 수험생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적절하고 논리적인지 점검한다.

셋째 부분

- [문제 2]에 제시된 세 가지 사례가 어떤 점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사생활 보호라는 이슈와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점검한다.
- 세 가지 사례로부터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의도치 않게 발생한 부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사생활 보호 원칙에 보완되어야 할 점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는지 점검한다.